

제주시 음식물 처리시설 설립 '난항'

기사등록 일시 : [2015-03-31 15:18:10]

【제주=뉴시스】 김용덕 기자 = 제주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설립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바이오가스) 설립과 관련 북촌리가 이날까지 유치에 따른 찬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지난 3일 입장을 밝혔으나 반대 주민들에 밀려 찬반 여부 공식 입장이 없는 상태다.

시는 지난해 4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동북리로 결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해 인근 마을인 북촌리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설립에 따른 북촌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선진 시설 견학(6회 158명) 등 주민들의 이해와 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은 당초 봉개동 매립장 내 시설할 계획이었으나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북촌리 옆 마을인 동북리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섬에 따라 이와 연계해 북촌리에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690억원을 투입해 하루 300t 규모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할 계획아래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다.

북촌리는 31일 현재 주민 70% 정도가 음식물 처리시설을 유치하자는 입장이 우세하지만 반대측에서 “절대 안된다”는 분위기에 밀리면서 법적 절차에 따른 주민 투표 공고 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다. 북촌리가 이 날 자정까지 찬반 여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1일 다른 방법 등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환경자원센터를 유치한 동북리의 경우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지역에는 151억원의 주민특별지원금이 지원된다.

kydjt6309@newsis.com